

# 고 김용균 대책위 '진상규명' '정규직 전환' 19일까지 정부에 답변 요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1.11 13:51

1/11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설 명절 전에 장례 치르게 해달라” 정부에 촉구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19일까지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안전 인력 확충' 두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19일까지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안전 인력 확충' 두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11일 11시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에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죽음 한 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달이 지나도록 김용균 님의 장례를 아직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설 명절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위로해주면 다 되는 것처럼 들려 안타깝다”면서 “아들이 원했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박석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와 정규직화를 지시했는데, 대통령령이 안서는 건지 사장들이 항명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최소한의 요구로 압축한 두 가지 사항이 이번에 꼭 수용돼서 장례를 치를 수 있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설 전에 장례를 치르려면 19일까지 정부의 확답이 나와야 한다”면서 “적절한 답변이 없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이번 고 김용균 사망 사건은 정부의 정책행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나온 많은 사례들과 다르다”면서 “이미 2017년에도 많은 안전 점검을 했지만 8년간 12명이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온 것은, 대통령이 약속한 바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어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19일 정부로부터 답변이 안 나올 경우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9일 범국민추모제 때에는 1만 명의 조합원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대책위는 “사고가 났던 현장 자동멈춤장치가 느슨해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팽팽하게 처리돼있고, 물청소 시스템이 태안 9,10호기는 없는 것으로 최초 도면에 나왔는데 현장 계수가 달라져있고, 안전장치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전수조사 했다고 보고가 돼있는데 로그 기록에 남아있어야 함에도 그 내용들이 지워지거나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mailto:kctu@hanmail.net)